

신행정수도 이전입지·건설 및 국가균형개발을 위한 전략적 차원의 방법론 고찰

A Study on Strategical Method for the Relocation and Construction of New Administrative Capital City and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in Korea

김 인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kiminn@snu.ac.kr)

우리나라는 21세기 초입에 들어와 다음과 같은 기회의 국면에 처해 있다. 첫째, 세계적 Global Standard Economy의 구현, 둘째, 동아시아 허브국가로의 탄생, 셋째, 지식 기반산업의 성장과 같은 세가지 기회에 직면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기회들을 잡아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국토의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공생적 공동번영의 개발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된다. 1961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행된 이래,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상생의 의존관계가 감소한 반면, 두 지역간 발전 격차는 증대되었다. 특히, 1977년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에 집중된 과도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호의존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에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합국토를 향한 공동 발전의 노력이 없는 한 지역갈등, 국가경제의 비효율성, 지역 불평등에 의한 국가의 미래 희망과 비존을 기대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격차 심화문제는 부정적 요소를 낳을 뿐이다. 예컨대, 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제적 연계 기반의 약화, ② 수도권의 자체적 확장효과(self-expanding effect)의 확대, ③ 수도권내에서의 집적불경제에 기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의 증대, ④ 국토공간상에 일극 중심의 공간 극화 현상의 심화. 이 것 들은 모두가 국가 발전에 바람직하지 못한 치유의 대상이다.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별법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분권 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이 통과됨으로써 참여정부의 2대 국정목표인 국가균형발전과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책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가지 특별법, 특히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의 합리적 실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신행정수도 건설과 연계한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개발전략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1세기 국가적 대과제인 전국토의 통합적 공동발전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간의 확고하고 지속적인 협력으로 추진되어야 할 일이다.